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해결해 나가는 모든 활동을 정치라고 생각해. 우리가 학급 회의에서 국회에 법률의 제정을 건의할 내용을 정하기 위해 토의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어.

내 생각은 너와 달라.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과 같이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볼 수 있어.



- ① 갑의 관점은 사회 집단 내에서 권력이 형성·분배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지 않는다.
- ② 을의 관점은 지방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 ③ 갑의 관점에 비해 을의 관점은 정치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④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정치가 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 ⑤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법치주의의 구체적인 의미와 실현 방식은 다른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러한 법률이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면 A의 측면에서는 그 자체로 정당하지만, B의 측면에서는 정당한 법으로서의 충분조건 중 일부만을 충족한 것이다. B는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법에 따른 통치만을 진정한 법치(法治)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 ① A는 정의에 부합하는 통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 ② B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A와 달리 B는 모든 입법 내용이 헌법 이념에 부합할 것을 강조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사법 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 ⑤ A와 B 모두 법률 제정 절차의 합법성이 곧 법률의 정당성을 담보한다고 본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헌법은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획일적 사고를 강요하지 않고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견해들이 평화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A를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 헌법은 민족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를 장려하는 데 주력한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서 학문과 예술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B가 여기에 담겨 있다.

- ① A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이다.
- ② A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의무 교육 제도의 시행을 들 수 있다.
- ③ B는 국가의 최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이다.
- ④ B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경제 정책 시행을 들 수 있다.
- ⑤ A와 B 모두 국민의 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4.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보 혁명이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A로 바라본 정보 기술은 국가의 배타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권력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보 기술은 첨단 하드웨어의 보급이나 국가 전략 사업의 발달 정도로 이해되며, 국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변수가 될 수 없다. 반면 B로 바라본 정보 기술은 세계 정치의 환경적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능하게 된 소통의 향상은 국제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상호 의존의 환경을 제공한다.

- ① A는 국제 사회는 보편적 선(善)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다.
- ② B는 국제 사회는 이성보다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 ③ A와 B 모두 국제 사회의 초국가적 행위체를 통해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A의 B에 대한 비판으로 ‘복잡한 국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적절하다.
- ⑤ B의 A에 대한 비판으로 ‘국제 사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적절하지 않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t+3 시기 중 갑국의 정부 형태는 2번 변경되었다. 한편, 갑국에서는 t 시기 말, t+1 시기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의회 의원 선출 선거 이외의 다른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으며, 선거 결과 ㉠에서 행정부 수반이 배출되었다. 표는 각 시기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회 의석률을 나타낸다. 단,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고, t+3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다.

구분	정당별 의회 의석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A당	B당	C당	D당	
t 시기	51	30	10	9	B당
t+1 시기	40	30	20	10	㉠
t+2 시기	10	52	18	20	㉡
t+3 시기	35	45	5	15	A당

*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률의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① t 시기에 달리 t+1 시기에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 ② t+1 시기와 t+3시기 모두에서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다.
- ③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하는 모든 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면, ㉡은 ‘A당’일 수 있다.
- ④ t+1 시기와 t+2 시기 모두에서 의회가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가진다면, ㉠과 ㉡이 동일한 정당일 수 없다.
- ⑤ ㉠과 ㉡이 ‘B당’으로 동일하다면, t+1 시기와 달리 t+2 시기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은 동일 인물이다.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우리나라 헌법 기관 A~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우리 헌법상 A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긴급 명령을 발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지체 없이 B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A를 의장으로 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인 C의 각 구성원은 명령 등을 발할 수 있는데, 해당 명령 등의 위헌·위법 여부는 D가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한편, B는 A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탄핵 여부는 E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F의 경우 행정부 내부의 대표적 통제 기관으로 헌법 기관들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A와 B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로 C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는 것을 들 수 있다.
- ② A는 C를 거치지 않더라도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B는 F가 제출한 결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C의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 A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D의 장(長)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될 수 없다.
- ⑤ E는 법원의 제청이 없는 경우 B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없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갑과 을 사이에서 A가 태어난 이후, 을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갑과 을은 이혼 조정을 거쳐 이혼하였고 A의 친권 및 양육권은 갑이 단독으로 갖게 되었다. 이후, 갑은 병과 법률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서 B가 태어났다. 한편 병은 A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한편, 을은 정과 결혼식만 치른 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서 C가 태어났는데, 정은 C를 인지하지 않았다. 그 후, ㉠ 정은 D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 ①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에서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한 이후에도, A의 친권자는 갑 뿐이다.
- ③ D와 달리 A는 입양으로 인해 입양 전 모든 가족 관계가 종료된다.
- ④ ㉠ 이후 갑이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A, B와 달리 을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⑤ ㉠ 이후 D는 정의 친족이지만 C는 정의 친족이 아니다.

8.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방식의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A는 차기 선거에서 탄소 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은 유권자들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로 구성된 B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C는 지구 환경 보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 ① A는 공익을 추구하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
- ② B는 정치 과정에서 투입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 ③ C는 선거를 통한 정치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활동한다.
- ④ '정부 정책을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 ⑤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집단인가?'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같은 선거에 출마한 다른 정당 후보자 을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을에 대한 실제 사실과 더불어 허위 사실을 공연히 공표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을은 갑을 고소하였다. 이후, 갑은 낙선을 목적으로 실제 사실을 공표한 것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 모두에 대하여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갑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후 갑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A에 상고함과 동시에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 제250조 제2항과 공직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법 제251조 각각에 대하여 (가) 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가 이를 기각하자 갑은 B에 □□법 제250조 제2항과 같은 법 제251조 모두에 대하여 (나) 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법 제250조 제2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 제251조의 경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① 갑은 A의 (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 ② 갑은 A의 판결에 대하여 B에 (나)를 청구하였다.
- ③ A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B에 (나)를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④ A는 갑이 선거 운동 중 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⑤ B는 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실제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28세)은 ㉠ A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갑과 검사 모두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갑은 ㉡ B에 대한 폭행 혐의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갑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2심에서 확정되었다. 한편, 갑이 폭행죄로 재차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A에 대한 갑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선고한 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해당 결정은 확정되었다.

- ① ㉠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기소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② ㉡으로 인해 갑은 영장 없이 수사 기관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었다.
- ③ ㉡에 대하여 B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 명령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④ 갑의 항소로써 ㉡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갑은 항소심 공판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 ⑤ 법원이 ㉠에 대해 집행 유예를 취소함에 따라 검사의 지휘에 따라 ㉠에 대해 갑에게 노역이 부과되는 형벌이 집행된다.

11. 다음 사례에서 을이 승소한 근거가 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자신이 판매하는 장치가 농산물의 숙성지연과 살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이를 을에게 판매하였다. 을은 해당 장치를 구매하여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하였는데, 몇 달 후 자신이 기르는 사과 일부에서 갈변 증상이 발생하자 을은 갑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갑이 제조한 제조물로 나타난 피해이므로 제조물 책임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을이 갑이 제조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갑이 해당 장치로 발생하는 오존의 부작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해당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은 갑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을은 해당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 ① 개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② 개인의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 ③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여 국가는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 ⑤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12.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 법

제1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금고 10년 이하 형에 처한다.
제2조 길에 침을 뱉은 자는 징역 15년 이상 형에 처한다.
제3조 타인에게 대면으로 욕설한 자는 징역형에 처한다.

교사: 다음은 A국의 ○○법(2025년 1월 시행)에 근거하여 A국에서 진행된 재판의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위의 자료와 가상의 판결문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에 근거하여 발표해볼까요?

판 결 문	판 결 문
<p>피고인 갑</p> <p style="text-align: center;">주 문</p> <p>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 유</p> <p>갑은 2025년 2월 1일, 길에 침을 뱉었음. 이에 따라 갑에게 ○○법 제2조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함.</p>	<p>피고인 을</p> <p style="text-align: center;">주 문</p> <p>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 유</p> <p>을은 2025년 4월 1일,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타인에게 욕설하였음. 이는 타인에게 욕설한 것이므로, 을에게 형법 제3조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p>

학생 : _____ (가)

—<보 기>—

ㄱ. ○○법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ㄴ. ○○법 제3조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ㄷ. ○○법 제1조와 비교할 때 ○○법 제2조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ㄹ. 을의 행위에 대해 ○○법 제3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13세)과 을(16세)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병(19세)의 가게에 찾아가 판매하던 물품을 절도하였고, 이에 화가 난 병은 갑과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절도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을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재판은 확정되었다. 한편, 병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되었다.

- ① 병과 달리 갑, 을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다.
- ② 을을 체포한 정은의 행위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③ 을은 기소 이전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였을 것이다.
- ④ 법원은 병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⑤ 병은 구속되어 기소되었으므로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4~15]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시오.

갑(17세)은 전자기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을(41세)에게 고가의 전자 기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자신의 법정 대리인(갑의 법정 감독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후 을은 공간 대여 사업을 하는 병(54세)과 대규모 전자기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을은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정(37세)에게 대규모 전자기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너무 많은 양의 주문을 받은 정은 자신이 고용한 A(24세)에게 전자기기 포장 업무를 지시 하였는데, A는 실수로 망가진 전자기기를 일부 포장하였다. 이후 배달은 받은 을은 제품의 고장 여부 파악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판매하였는데, 갑이 받은 전자기기와 병이 받은 전자기기 일부가 망가진 채로 도착하였다. 이에 화가 난 갑과 병은 을의 가게에 동시에 찾아가 을을 폭행하였다. 을은 자신이 폭행을 당한 사실에 화가 난 나머지 A를 자신의 대리점 앞 골목으로 불러 폭행하였는데, 폭행 도중 을의 대리점에 있던 간판이 떨어져 을과 A 모두 다치게 되었다. 한편, 을은 사고 당시 B의 건물을 임차하여 전자기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14.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이 아닌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③ 정에게 고용된 A는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④ 정은 갑과 병 모두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⑤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5. 위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갑의 법정 대리인은 을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ㄴ. 갑이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면, 갑의 법정 대리인은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병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을 폭행하였으므로 병은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을의 A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B는 을, A 모두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진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중 하나임.)

우리나라에서 의결 기관 A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며, 집행 기관인 B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B는 A가 의결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지방 자치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① A는 B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 ② B는 주민 소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A와 달리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 ④ B와 달리 A는 중앙 정부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 ⑤ A와 B 모두 연임 제한 없이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A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다. 이에 대해 갑은 자신이 노동조합의 장(長)임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판단해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하여, 을은 회사의 해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당 해고에 대하여 각각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갑의 업무 태만에 한정한 이유로 행해짐이 인정되나, 을과 달리 갑에 대한 해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갑과 달리 해당 판단에 불복한 A 회사와 을은 모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A 회사와 을은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을의 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으며, A 회사는 을이 부당 해고를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한 점을 들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① 갑을 대상으로 한 A 회사의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하여 지방 노동 위원회와 행정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다르다.
- ② 행정 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A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 ③ 을이 제기한 ㉠은 해고의 효력이 없음을 다투는 소이다.
- ④ 을은 ㉠을 청구하여야 A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을은 A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의 복합적 현안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A는 국제 평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A는 오히려 특정 국가의 정치 이념 등으로 인해 국제 평화의 일차적 책임을 온전히 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B의 경우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반한 토론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 ㉡도출된 합의사항이 현실적 구속력이 결여 되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C의 법적 해석을 통한 분쟁 해결 방안을 두고 있으나, 당사국들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 ① ㉠에 따라 A에서 채택된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는 B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의 원인으로 B에서 의결되는 결의안이 국제 사회에서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③ A는 모든 상임 이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절차 사항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 ④ B는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C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 ⑤ C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모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국제 연합의 회원국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19. 기본권 유형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중 하나임.) [3점]

-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경시되지 않는 포괄적 권리인가?’라는 질문으로 A, B와 C, D를 구분할 수 있다.
-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권리인가?’라는 질문으로 B와 C, D를 구분할 수 있다.
-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인가?’라는 질문으로 C와 A, D를 구분할 수 있다.

- ① A는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행사되는 수단적 권리이다.
- ② B는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 ③ C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다.
- ④ D는 국민이 국가 단위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⑤ A, B와 달리 C, D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00개의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로 지역구 의원 100인을 선출하며,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100인의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한다. 각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해 1표를 행사하여 총 2표를 행사한다. 다음은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석률(%)	35	30	25	10
정당 득표율(%)	40	30	20	10

갑국은 현행 선거를 치른 이후 다음과 같은 선거 제도 개편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회 의원 선거 개편안]

지역구 의원 정수(定數)를 150석, 비례 대표 의원 정수(定數)를 50석으로 정한다. 지역구의 개수는 50개로 하고 각 선거구에서 동일한 인원만큼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며, 각 정당은 각 선거구에 최대 2인을 공천할 수 있다. 한편, 비례 대표 의원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총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만큼 할당하며, 할당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다. 단, 정당에 할당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은 경우 초과 의석을 인정되지 비례 대표 의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편안에 따른 선거 결과 예측]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석률(%)	40	30	20	10
정당 득표율(%)	25	35	20	20

- ①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정당 득표율 대비 총의석률이 높은 정당은 2개이다.
- ② 지역구 선거의 선거구 제도의 경우 현행과 달리 개편안에서 선거구 간 유권자의 표의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개편안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 지역구 의석 중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
- ④ 개편안에 따르면,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는 감소한다.
- ⑤ 개편안에서 A당이 모든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B당과 D당이 동시에 의석을 확보한 지역구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